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허성무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575
----------	------

발의연월일 : 2025. 4. 3.

발 의 자 : 허성무 · 김문수 · 서미화
김정호 · 김주영 · 양부남
김종민 · 김동아 · 문대림
오세희 의원(10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2017년 이후 지방의 주력산업인 조선·자동차 산업 등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시 전국적인 균형발전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음.

2024년 기준 전국 288개 시·군·구 중 130개(57.0%) 시·군·구가 소멸위험지역으로 평가된 상황에서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지역의 혁신성장 및 인구·소득 증대를 촉진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지방에 대규모 투자 유치가 가능한 기회발전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기회발전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투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방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인력 양성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5조 및 제6조).
- 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종합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함(안 제8조).
- 라.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할 수 있음(안 제9조).
- 마.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조성,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원, 기회발전특구진흥재단의 설립, 기업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주택공급에 대한 특례, 부담금 감면의 특례 등 종합적인 지원 규정을 마련함(안 제13조부터 제27조까지).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회발전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2. “지방”이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다만, 수도권 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 중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포함한다.
3. “지방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수도권 중 시·군·구(자치구의 구를 말한다)별로 인구과밀·산업입지·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의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

나. 기업이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것

4. “지방기업”이란 지방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5. “기회발전특구”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제9조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6. “기회발전특구 개발사업”이란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시행되는 산업단지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의 발전과 기회발전특구 간의 연계·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기회발전특구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방투자 및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

제5조(지방투자에 대한 재정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투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투자에 소요되는 금액 중 토지매입가액의 일부, 설비투자금액의 일부 및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지방기업에 대한 인력 양성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산업계·대학·연구기관 등과 연계하여 인력 양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력 양성 지원의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등

제7조(기회발전특구의 조성·육성의 기본원칙) 기회발전특구의 조성 및 육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혁신산업의 생태계 구축
2. 문화·교육·복지·보건의료 등이 복합적으로 갖추어진 정주환경 조성
3. 혁신산업의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환경 조성

제8조(기회발전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기회발전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발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회발전특구의 기본 목표 및 중장기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2. 기회발전특구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기회발전특구의 운영 현황 및 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회발전특구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성과 평가결과와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종합발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의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종합발전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지

방시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발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종합발전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신청 등) 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권 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도시
3.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심융합특구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7.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지역혁신융복합단지
 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9. 그 밖에 시·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지방투자를 하려는 기업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시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충분한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가 가능할 것
 2. 근로자 등의 정주 환경의 확보 또는 연계가 가능할 것
 3. 기회발전특구의 개발에 필요한 부지와 광역교통망·정보통신망·용수·전력 등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4. 기회발전특구의 개발에 경제성이 있을 것
 5. 기회발전특구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 연계 발전할 가능성이 높을 것
 6. 그 밖에 지방 혁신산업의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발전 가능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회발전특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회발전특구의 목적·명칭·위치 및 범위
2.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에 따른 비용 및 효과
3. 기회발전특구의 개발 및 관리 방법
4. 기회발전특구 내 산업의 육성 전략
5.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지원 계획
6. 기회발전특구 투자 등에 필요한 규제의 특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지정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회발전특구 관할 시·도지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해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지정변경 및 지정해제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효과) ① 제9조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기회발전특구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수립·확정·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는 것으로 본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변경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수립
 3.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변경
 4.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승인,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변경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혁신지구의 지정·변경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변경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7.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투자선도지구의 지정·변경
 8.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를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1조(기회발전특구 사업협의체의 구성 등) ① 시·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조성을 위하여 기회발전특구 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으로 구성된 사업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협의체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2. 기회발전특구 개발사업의 시행자
3. 지역혁신·지역균형발전·산업 육성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사업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기회발전특구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회발전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구역·특구·지구·단지·도시 등으로 지정·조성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2.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
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능지구의 지정
4.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5.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
6.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및 제11조에 따른 드론시범사업구역의 지정
7.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조성
8.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지정
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10.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른 문화도시의 지정
1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혁신도

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1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13. 그 밖에 기회발전특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구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지정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기회발전특구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른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장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을 위한 지원

제13조(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조세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조성) ①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조성하려는 자는 출자금 총액, 출자지분 비율,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집합투자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기회

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 등에 투자하여야 한다.

제15조(기회발전특구 개발사업을 위한 재정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기회발전특구 내 연구개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연구개발하는 자의 제품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거나 필요한 연구 자료를 제공하는 등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및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임시허가 및 실증 등을 위한 특례지원) ① 정부는 기회발전특구를 지역에 적합한 혁신산업의 실험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임시허가, 실증 및 규제 적용의 특례 등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1.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3. 「산업융합 촉진법」
4.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5.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6. 그 밖에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이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임시허가, 실증 및 규제 적용의 특례 등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진흥재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기회발전특구규제샌드박스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회발전특구규제샌드박스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기회발전특구진흥재단의 설립) ① 기회발전특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효율적·체계적 관리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기회발전특구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회발전특구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지원
2. 기회발전특구 내 산업단지·교육시설·주택단지 등의 조성·관리
3. 기회발전특구 내 교육·문화·의료·정보통신·유통산업 등의 육성·지원
4.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연구소 등 기관 투자유치 및 지원
5. 기회발전특구 내 미래혁신산업의 사업화 촉진 지원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④ 그 밖에 재단의 설립,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한 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기업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기업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회발전특구 내에 입주하는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기술 지원
2. 기회발전특구 내에 입주하는 산·학·연·관의 연계를 통한 공동 기술 개발
3. 기회발전특구 내 과학·산업 기술 인력의 교육 및 훈련
4. 기회발전특구 내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의 공동이용
5. 기회발전특구 내 산업과 기술에 관한 정보 교류
6. 그 밖에 기회발전특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운영) ① 기회발전특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체육시설 등 행정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

공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기회발전특구 성과의 평가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별 운영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별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

제22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① 기회발전특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공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공급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기회발전특구에서 그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시·도지사의 추천으로 관할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의 추천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 및 학생 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24조(전학·입학 편의 제공)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등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의 자녀들이 해당 기회발전특구 및 인근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중등학교에 전학·입학을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회발전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 또는 입주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업무시설, 체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대상, 감면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6조(국유·공유 재산 무상대부 등) ① 국가는 기회발전특구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또는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③ 제2항의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난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그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④ 기회발전특구 관할 시·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그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⑤ 국가는 기회발전특구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양여, 대부, 사용·수익허가의 조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회발전특구 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점용료·사용료·비용·협력금 등을 해당 근거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료·사용료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 따른 기반 시설설치비용
4.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5.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광역 교통시설 부담금
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7.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8. 「수도법」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9.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1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 하는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11.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12.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제5장 보칙

제28조(국회에 대한 보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

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